

여한구 “쿠팡 조사, 한미 외교·통상 현안 확대해석 부적절”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디지털입법 동향 등 입장 설명
쿠팡 관련 객관적인 조사 강조
“美 기업 불리한 대우 없을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쿠팡 사안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 집행 문제일 뿐, 양국 외교·통상 현안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연방의회와 업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한국의 디지털 입법 취지와 최근 불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우리의 국내 디지털 입법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 등을 청취했다. /산업부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 의회 앤디 킴 상원의원 등을 면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관

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에서도 쿠팡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특파원들을 만나 “(그리어 대표에게)쿠팡 이슈의 본질은 데이터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우려기 때문에 한국 정부건 미국 정부건 당연히 이렇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하에, 관련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미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던 양국 간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도 논의했다.

또 국제경제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협의를 이룬 한국이 여

타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을 미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향후 IEEPA 판결 관련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 합의 이후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반도체 관세 조정과,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련 판결 동향 점검을 위해 방미 일정을 하루 연장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부 인증제도 대거 정비… 2800억 절감 기대

국표원, 인증제도 정비방안 마련
유사 제도 간 통합 등 합리화 초점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 제도 67개를 대거 정비한다. 이를 통해 약 2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주기(2025~2027년)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에 따른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적합성평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법령·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일부 인증은 유사·중복되거나 기준이 불합리해 기업의 비용 부담과 시장 진입 규제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인증제도 수는 1주기(2019~2021년) 186개에서 2주기(2022~2024년) 222개로 늘었고, 기술 혁신에 따른 신규 인증 도입으로 3주기에는 246개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인증제도 246개를 대상으로 2025년 79개, 2026년 84개, 2027년 83개를 순차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3주기 첫해인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해 ▲폐지 23개(29.1%) ▲통합 1개(1.3%) ▲개선 43개(54.4%) ▲존속 12개(15.2%)로 정비한다. 폐지 대상 23개 가운데 12개는 실효성 미흡에 따른 단순 폐지, 5개는 폐지 후 타 제도로 통합, 6개는 지정·허가제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전환된다.

대표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던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인증’은 폐지된다. ‘순환자원 품질 인증’은 관련 법 내 유사 제도와 통합이 권고됐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은 인증 방식 대신 지정·허가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와 행정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유사 제도 간 통합도 추진된다.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제’에 흡수·통합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존속이 필요한 43개 제도는 운영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 손질된다. 이 중 21개는 타 인증 결과 인정, 소요 기간 단축 등 부담 경감 조치를 적용하고, 13개는 미흡한 규정 정비와 파생 모델 인정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운영을 합리화한다. 나머지 9개는 인증 정보 공개 확대와 최신화 등 정보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민간 인증

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 결과를 인정해 중복 평가를 줄이고, 유효기간 확대와 소요 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춘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모델과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한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은 인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반면자동차·자동차부품자기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등 국민 안전이나 국제 협약 이행과 직결되는 12개 제도는 필수 인증으로 판단해 존속한다.

국표원은 이번 인증 정비에 따라 인증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인증·시험 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향후 10년간 약 2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각 부처는 이번 정비방안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아직 검토되지 않은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추가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적자 90조 달해

역대 세번째로 큰 규모 적자 기록

지난해 나라살림을 적자가 11월까지 누계 기준 9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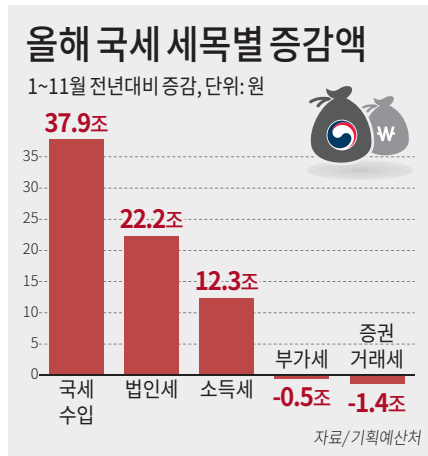
기획예산처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조3000억 원 확대됐다. 적자 규모가 2020년 98조3000억 원, 2022년 98조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기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46조3000억원 흑자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 운용을 보면 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2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624조4000억 원으로 54조3000억원 늘면서 지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웃돌았다.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 원으로 전년도 37조9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2000억원 늘었고,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2조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5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4000억 원 줄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1개팀 추가 공모… 네이버·NC 등 재기회

>> 1면 ‘정체성 당락…’서 계속

이는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논란에 대해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결과로 풀이된다. 기술적 측면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하더라도 가중치를 초기화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최소 조건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정책적으로도 외산 모델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끊고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프로젝트 취지상, 네이버의 방식은 국가 기밀 유출 방지가 운영 통제권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함께 탈락한 NC AI는 제조와 국방 등

특정 산업에 최적화된 버티컬 AI 전략을 선보였으나 점수 경쟁에서 밀려났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독자성 논란과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개 팀을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를 포함해 역량 있는 기업들에게 다시 기회를 열어주어 2026년 상반기까지 4개 정예팀 체제의 경쟁 구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SNS를 통해 “이번 평가 결과는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재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발족

국정원·국세청 등 범정부 차원 협력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15일 발족됐다. 재정경제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복잡·지능화되는 외환범죄에 단일기관 대응의 한계가 커져 자 유관기관이 역량을 결집하게 됐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공동

으로 추적·적발하기로 한 것이다.

대응반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분석을 통해 ▲환치기 ▲수출입가격 조작 ▲허위신고를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절차 악용 역외탈세 ▲자금세탁 등 전반에 걸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국경간 거래대금 지급·수령(이른바 환치기), 가격조작, 허위신고 수법 등 고도화된 수법에 대해 정밀 추적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무역업체들의 외환 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에서 이 같은 불법 외환거래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